

정보화와 정치적 삶의 질

金容福* · 崔 明**

〈목

차〉

- | | |
|--------------------|--------------------|
| I . 머리말 | III . 고도 정보화와 정치활동 |
| II . 행정전산화와 개인의 삶의 | IV . 맷음말 |
| 질 | |

I . 머리말

정보처리 및 각종 통신기술의 혁명적 발달이 야기한 '정보화 혁명'은 현대 산업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은 이미 선진 국민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후발발전국가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도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이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실제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정보화 사회라고 함은 기존의 정보매체의 확대에다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처리 기술과 전기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진보와 이 두 기술의 점진적인 결합에 의하여 나타나는 정보통신 서비스들의 다양화와 그리고 이들의 보편적 이용에 의하여 특징지워진 사회를 일컫는다(박성호, 1992: 5). 이러한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크게 사회 전반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도 향상시킬 것이란 낙관적인 견해와 인간소외, 사생활 침해와 불평등 심화 등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이 확대될 것이란 비관적인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에서 정치가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견해와 비관적인 견해로 크게 대립되어 왔다. 낙관적인 견해에서는 다양한 뉴미디어에 의해 중앙과 지방의 정보 격차가 해소되고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정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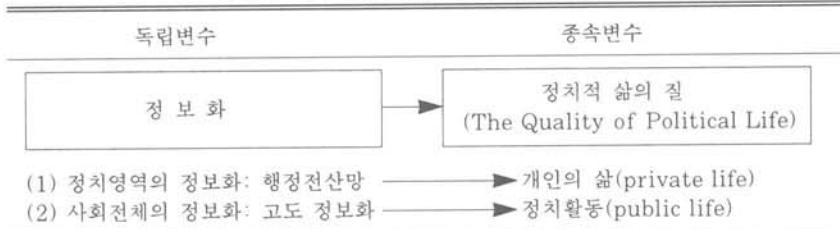
**서울대학교 교수, 정치학.

그 결과 독자적인 지역문화, 자립적인 지역사회, 분권화된 행정, 참여적인 정치민주화(participatory democracy)가 진행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Bell, 1973; Toffler, 1981). 참여민주주의란 일반시민들이 직접 지방정부나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데에 광범하고 직접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다. 즉 대의제 민주주의(간접민주주의)적 요소가 축소되고 지금까지 인원·비용·시간 및 기술적인 어려움때문에 불가능하였던 직접민주주의적 요소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최신 컴퓨터 기술과 뉴미디어의 발전은 부정적으로 악용되어 검열제도, 언론통제, 정보의 편중과 조작 등 각종 규제와 억압에도 이용되어 왔다. 즉 정보에 의한 사회의 통제가 전체주의의 강화에 이용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의 고도화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를 축적·유통시킨다.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면 개인의 권리와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중대한 위협이 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정보화의 진전은 미래의 정치적인 생활을 개선시키거나 악화시킬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진다(안청시, 198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보화가 개인의 정치적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래 삶의 질이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외부환경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을 보람있게 만드는 개인의 복지와 관련된 개념으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삶의 질이란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으로 개인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경험하는 만족감·좌절감·실망감·충만감 등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로 측정된다(Shin and Chey, 1992: 6-7). 따라서 삶의 질 개념에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삶의 영역들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학자에 따라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세부영역들은 다양하게 분류되지만, 대체로 사적인 영역(private sphere)과 공적인 영역(public sphere)이라는 두 가지 큰 영역으로 나누어 고찰되어 왔다(Campbell, Converse and Rodgers, 1976; Andrews and Withey, 1976). '삶의 질'을 연구하는 것은 바로 두 영역에서 삶이 개선되었느냐 혹은 악화되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적인 영역에는 건강·교육·가족·동료·종교·여가 등과 같은 분야가 속하며, 공적인 영역에는 경제적인 복지, 법과 질서의 유지, 정부 혜택의 공정한 배분,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국민 의사의 반영 등과 같은 분야가 속한다(Shin and Chey, 1992: 8).

본 연구의 목적은 이 두 영역을 포괄하여 정치적 삶의 질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정치와 관련된 정보화 즉 행정전산망의 구축이 개인의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고찰한다. 즉 정치영역이 정보화된다면 개인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다음으로 고

〈표 1〉 '정보화와 정치적 삶의 질' 분석 틀



도로 사회의 정보화가 진행될 경우 정치 영역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 정치활동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고찰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표 1〉과 같다.

이러한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서 각각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 ① “귀하는 행정전산망 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② “행정전산망이 구축되어 운영된 후, 귀하의 삶의 각 영역이 개선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③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정보화가 고도로 진행된다면, 정치활동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치영역의 정보화(행정전산망)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효과 및 사회전체의 정보화(고도 정보화)가 정치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개별적으로 분석한 후, 다시 종합하여 정보화와 정치적 삶의 질의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며, 필요할 경우 정보매체의 이용자와 비이용자간의 삶의 질 인식 차이는 어떠한가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1993년 2월에 실시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결과이다. 표본은 직업에 따라 제조·유통·서비스부문, 금융부문, 언론·출판부문, 학술연구 부문 종사자로 나누어 서울에 거주하는 총 420명을 추출하였다.

Ⅱ. 행정전산화와 개인의 삶의 질

행정전산망 사업은 최신의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전산화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완성하여 고도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행정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즉 행정전산망은 주전산기와 일선 행정기관 등에 보급된 다기능 사무기기가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됨으로써, 전국 어디에서나 행정에 관련되는 각종 자료의 조회 및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행정전산망을 추진하는데에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과 전국적으로 공평·신속·정확한 정보 전달체계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켜 민주복지국가의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더불어 체계적인 행정전산화로 비용을 절감하고 한편으로 행정전산망 사업에 국내 민간업체를 참여시켜 국내정보산업의 발전을 기한다는 이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89: 23).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00년까지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선진국 수준의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부처원에서 행정·금융·교육연구·국방·보안 등 5개 분야의 국가기간 전산망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박한규, 1991). 따라서 행정전산망 구축도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니다. 이러한 행정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이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보자.

1. 행정전산망 구축과 개인의 삶의 질

“행정전산망 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조사대상자 420명 중 23.3%인 98명만이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을 하고 있고, 76.7%인 322명은 “이용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다”가 36.4%, “사무·판매·금융자동화 기술을 이용한다”가 63.1%인 것에 비추어볼 때,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일상생활에서 정보화 매체의 이용이 뒤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2>에서 행정전산망을 이용한 집단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약 2배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이며, 4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가장 많은 비율인 31.9%의 분포를 보이며 이어 20대 후반과 30대 그리고 20대 전반의 순이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고학력 일수록 행정전산망을 이용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중에 27.9%가 행정전산망을 이용한 반면에,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소유한 사람들중에는 13.0%가 행정전산망을 이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종사부문별로 살펴보면, 학술연구부문, 제조·유통·서비스부문, 언론·출판부문, 금융부문 순으로 행정전산망을 이용한 비율이 높다. 본인소득과 가족소득은 분포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표 3>은 “행정전산망이 구축되어 운영된 후, 다음과 같은 삶의 각 영역이 개선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응답 분포이다. 조사된 삶의 각 영역은 정신적인 피로감, 지식의 습득, 건강, 여가와 오락 등과 같이 개인과 관련된 항목: 가족생활, 자녀교육 등 가족과 관련된 항목: 동료들과의 접촉, 인간관계, 이웃 등 대인관계와 관련된 항목: 작업장이나 사무실의 작업환경과 주거조건 등 주변환경과 관련된 항목 등 총

〈표 2〉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수별 행정전산망 이용 실태

배경변수	이용해 보았다	이용하지 않았다	계
전체	23.3%	76.7%	100.0%
성			
남자	27.8	72.2	100.0
여자	14.0	86.0	100.0
연령			
24세 이하	11.7	88.3	100.0
25~29세	26.7	73.3	100.0
30~39세	22.4	77.6	100.0
40대 이상	31.9	68.1	100.0
교육수준			
고등학교	13.0	87.0	100.0
초급·전문대학	25.9	74.1	100.0
대학교	24.2	75.8	100.0
대학원 이상	27.9	72.1	100.0
종사부문			
제조·유통·서비스부문	25.4	74.6	100.0
금융부문	16.0	84.0	100.0
언론·출판부문	22.2	77.8	100.0
학술·연구부문	29.3	70.7	100.0
본인소득			
71만원 이하	22.2	77.8	100.0
72~119만원	20.7	79.3	100.0
120~167만원	27.1	72.9	100.0
168만원 이상	26.7	73.3	100.0
가족소득			
143만원 이하	33.3	66.7	100.0
144~215만원	18.6	81.4	100.0
216~311만원	24.5	75.5	100.0
312만원 이상	18.6	81.4	100.0
성장지역규모			
대도시	21.3	78.7	100.0
중소도시	28.8	71.2	100.0
읍	26.5	73.5	100.0
면 이하	23.7	76.3	100.0

11개 문항이다.

정신적인 피로감에 대해서는 “개선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9.8%로 가장 높으며, “악화될 것이다”는 19.8%, “현재 그대로일 것이다”가 19.3%

〈표 3〉 행정전산망 구축 이후 삶의 각 영역의 변화에 대한 인식

항 목	악화 ← ----- 그대로 ----- → 개선						
	-3	-2	-1	0	1	2	3
정신적인 피로감	2.9%	6.2%	10.7%	19.3%	26.2%	23.1%	10.5%
작업환경	0.0	2.4	6.0	19.5	33.1	28.3	9.8
동료들과의 접촉	3.1	14.0	28.1	32.9	12.1	5.2	3.3
인간관계	4.3	14.5	29.8	31.0	11.0	5.5	2.4
지식의 습득	0.1	2.1	2.4	16.9	35.2	30.5	11.4
이웃	2.1	10.7	29.8	39.5	11.9	2.6	2.1
주거조건	0.5	1.2	6.9	40.7	26.9	16.4	6.4
가족생활	1.0	3.6	8.6	39.5	25.5	16.2	4.8
건강	2.4	6.9	16.9	45.5	14.8	9.3	3.3
자녀 교육	1.0	2.4	5.0	36.7	27.9	20.2	6.0
여가와 오락	0.5	2.4	4.5	31.4	27.1	21.9	11.2

이다.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개선이 71.2%, 그대로가 19.5%, 악화가 8.4%이다. 동료들과의 접촉은 악화가 45.2%, 그대로가 32.9%, 개선이 20.6%이다. 인간관계는 악화가 48.6%, 그대로가 31.0%, 개선이 18.9%이다. 지식의 습득은 개선이 77.1%로 압도적이며, 그대로가 16.9%, 악화가 4.6%이다. 이웃에 대해서는 42.6%가 악화, 그대로가 39.5%, 개선이 16.6%이다. 주거조건은 개선이 49.7%, 그대로가 40.7%, 악화가 8.6%이다. 가족생활은 46.5%가 개선될 것으로 39.5%가 현재 그대로일 것으로, 13.2%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강은 그대로일 것이라는 응답이 45.5%,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27.4%,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26.2%이다. 자녀교육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54.1%, 현재 그대로일 것이라는 전망이 36.7%, 그리고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8.4%이다. 여가와 오락에 대해서는 60.2%가 개선될 것을, 31.4%가 변하지 않을 것을, 그리고 7.4%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행정전산망이 구축되어 운영된다면,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한 영역은 지식의 습득(77.1%), 작업환경(71.2%), 여가와 오락(60.2%), 정신적인 피로감(59.8%), 자녀교육(54.1%), 주거조건(49.7%), 그리고 가족생활(46.5%) 등이다. 반면에 응답자들이 다소 부정적으로 전망한 영역은 인간관계(48.6%), 동료들과의 접촉(45.2%), 이웃(42.6%) 등 3개이다.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높은 영역은 건강(45.5%)이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개인·가족·환경과 관련된 영역에서 행정전산망의 이용이 삶의 질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 응답비율은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즉 지식의 습득이나 작업환경은 행정

전산망의 구축에 매우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전망하고 있지만, 주거조건이나 가족생활은 과반수 이하의 응답자들만이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건강은 행정전산망과는 다소 무관한 영역으로 비춰진다. 그리고 응답자들 다수는 인간관계, 동료들과의 접촉, 이웃 등의 대인관계 영역은 비슷한 비율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다른 영역보다는 대인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각 항목에 대하여 -3점(악화)에서 3점(개선)까지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점수를 산정하여 살펴보자. 〈표 4〉는 각 항목의 전체 평균점수와 종사부문별 평균점수를 비교하여 살펴본 것이다. 11개 항목 전체에 대한 평균점수는 0.45점으로 행정전산망의 이용이 삶의 각 영역을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평균점수에 따라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낙관적으로 전망된 영역을 살펴보면, 지식의 습득(1.25), 작업환경(1.09), 여가와 오락(0.95), 자녀교육(0.74), 정신적인 피로감(0.73), 주거조건(0.69), 건강(0.55), 가족생활(0.54) 등이며, 반대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 영역은 동료들과의 접촉(-0.33), 이웃(-0.34), 인간관계(-0.43) 등이다. 즉 개인·가족·주변환경과 관련되는 영역은 모두 개선될 것이라는 양(+)의 평균점수를 보이나, 대인관계는 모두 음(-)의 평균점수를 보여 응답자들은 행정전산망의 이용에 따라 인간관계의 소원, 이웃과의 소외, 개인주의화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를 종사부문별로 비교하여 보자. 먼저 각 종사부문에서 낙관적인 전망이 제시된 영역을 살펴보면, 학술연구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은 작업환경, 지식의 습득, 정신적인 피로감, 여가와 오락 등의 4개 영역에서; 금융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은 지식의 습득, 여가와 오락, 작업환경, 정신적 피로감 등의 4개 영역에서; 언론·출판과 제조·유통·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식의 습득,

〈표 4〉 삶의 영역의 평균점수 및 종사부문별 평균점수

항 목	평균점수	제조유통서비스	금융부문	언론·출판	학술연구
정신적인 피로감	0.73	0.45	0.91	0.58	1.04
작업환경	1.09	1.01	1.14	0.94	1.30
동료들과의 접촉	-0.33	-0.38	-0.34	-0.41	-0.19
인간관계	-0.43	-0.47	-0.51	-0.50	-0.24
지식의 습득	1.25	1.25	1.46	1.11	1.16
이 웃	-0.34	-0.32	-0.35	-0.45	-0.26
주거조건	0.69	0.64	0.90	0.56	0.68
가족생활	0.54	0.41	0.72	0.52	0.55
건 강	0.55	-0.06	0.07	0.04	0.19
자녀교육	0.74	0.75	0.86	0.63	0.73
여가와 오락	0.95	0.86	1.17	0.87	0.91

작업환경 등의 2개의 영역에서 매우 낙관적인 개선의 전망을 보였다. 반면에 비관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 영역은 언론·출판종사자들은 인간관계, 이웃, 동료들과의 접촉 등 대인관계에 관련된 3개의 영역: 제조·유통·서비스 종사자들은 인간관계, 동료들과의 접촉, 이웃, 건강 등 개인과 대인관계에 관련된 4개의 영역: 금융부문 종사자들은 인간관계, 이웃, 동료들과의 접촉 등 역시 대인관계에 관련된 3개의 영역 등이었다.

한편 각 영역에서 가장 높은 개선 혹은 악화전망을 보인 종사부문을 살펴보자. 정신적인 피로감, 작업환경, 동료들과의 접촉, 인간관계, 이웃, 건강 등 6개 영역에서는 학술연구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이: 지식의 습득, 주거조건, 가족생활, 자녀교육, 여가와 오락 등 5개 영역에서 금융부문 종사자들이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나타내었다. 반면 작업환경, 동료들과의 접촉, 지식의 습득, 이웃, 주거조건, 자녀교육 등 주변환경과 대인관계에 관련된 6개의 영역에서는 언론·출판 종사자들이: 정신적인 피로감, 가족생활, 건강, 여가와 오락 등 개인과 가족에 관련된 4개 영역에서는 제조·유통·서비스부문의 종사자들이: 인간관계의 1개 영역은 금융부문 종사자들이 가장 비관적인 견해들을 보였다. 결국 행정전산망 혹은 정보화가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는 학술연구부문과 금융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반면에, 비관적인 견해들은 언론·출판부문과 제조·유통·서비스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견된다.

한편 행정전산망의 구축 및 운용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성, 연령, 교육수준, 가족소득 등의 응답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기본변수와의 관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성은 t-test를, 나머지 변수는 ANOVA의 F-test를 하였다. t-검정 및 F-검정 결과, 부분 집단간 차이가 유의수준 5% 이내에서 유의미한 것을 제시한 것이 <표 5>이다.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는 개인의 삶의 영역은 작업환경, 주거조건, 가족생활, 건강, 여가와 오락 등이며, 연령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 영역은 주거조건이다. 즉 사회 인구학적 변수가운데 유의수준 5%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성과 연령이었으며 나머지 사회·인구학적 기본변수들은 부분집단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여자에 비해 남자는 작업환경, 주거조건, 가족생활, 건강, 여가와 오락 등의 영역에서 행정전산화가 삶의 질을 더 개선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자는 다른 영역도 낮은 평균점수를 보이지만 특히 건강은 더 악화된다고 보면서 정보화 결과에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연령이 높은 층이 젊은 층에 비해 행정전산화가 실시되면 주거조건이 개선된다고 보고 있다. 즉 20대 전반의 응답자는 40대 이상의 절반 정도

〈표 5〉 집단간 평균점수 차이가 유의미한 '행정전산망과 삶의질' 항목들

독립변수	삶의 영역	구 분	평균점수	유의수준
성	작업환경	남자 여자	1.18 0.92	0.038
	주거조건	남자 여자	0.79 0.48	0.006
	가족생활	남자 여자	0.66 0.30	0.004
	건강	남자 여자	0.16 -0.17	0.008
	여가와 오락	남자 여자	1.04 0.75	0.023
연령	주거조건	24세 이하	0.40	0.041
		25~29세	0.69	
		30~39세	0.73	
		40세 이상	0.93	

도 못 미치는 주거조건 개선 전망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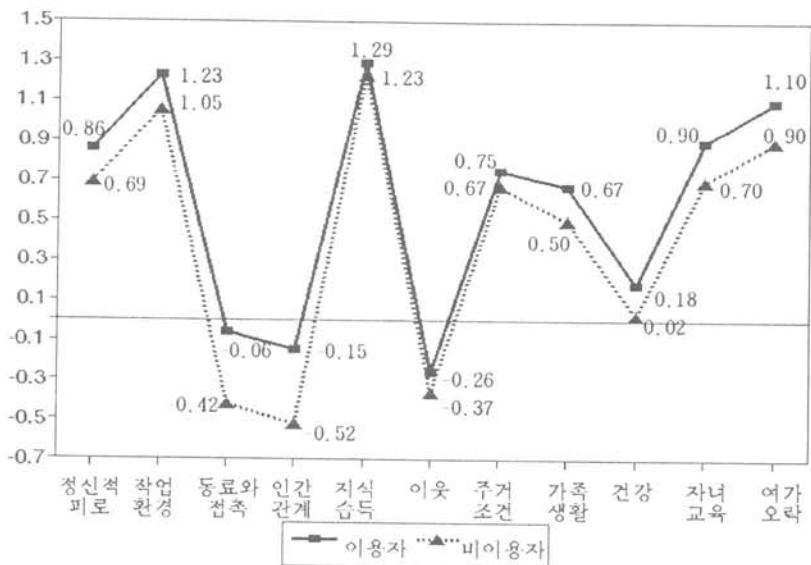
2. 행정전산망 이용집단과 비이용집단의 비교

각 삶의 영역들을 행정전산망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나누어서 각 평균점수를 비교하면 〈그림 1〉과 같다.

행정전산망 이용자는 비이용자에 비해 정신적인 피로감, 작업환경, 지식의 습득, 주거조건, 가족생활, 건강, 자녀교육, 여가와 오락 등의 영역에서 삶의 질이 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이며; 동료들과의 접촉, 인간관계, 그리고 이웃 등의 영역에서는 덜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결국 행정전산망을 이용한 사람들은 행정전산망의 구축과 그 이용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낙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화의 이용자들이 느낀 정보화매체의 편리함과 익숙함 때문에, 그들은 비이용자들보다 훨씬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기할 점은 행정전산망 이용자들도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 점은 이용자, 비이용자 모두 정보화가 개인의 삶에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 개인주의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의 일치가 존재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6〉을 통하여 행정전산망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이용한 경험이

〈그림 1〉 행정전산망 이용자·비이용자의 삶의 질 평균점수 분포



〈표 6〉 행정전산망 이용집단과 비이용집단의 평균점수 차이 분석

구 분	이용집단	비이용집단	유의수준
전체 평균	0.59	0.41	0.032
동료와의 접촉	-0.06	-0.42	0.016
인간관계	-0.15	-0.52	0.009

없는 집단간의 t-test를 이용하여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인 항목을 살펴보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개인의 삶 전체 평균점수와 하위항목으로 동료들과의 접촉, 인간관계 등이다.

이용집단은 비이용집단에 비해 동료들과 접촉, 인간관계 등에서 상당히 덜 악화될 것이라고 보며, 전체적으로 이용집단은 행정전산망이 개인의 삶의 질을 다소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이용집단이 비이용집단보다 덜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III. 고도 정보화와 정치활동

1. 정보화 사회 이후의 정치활동 전망

고도정보사회에서 정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및 전문

가 사이에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대립되어 있으며, 여러 통로를 통해 그 견해가 알려져 있다.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살펴보려는 것이 본 조사연구의 목적이다.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는, 바로 개인이 느낀 행복감이라는 주관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한 척도로 작용한다(신도철, 1982). 결국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정치활동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알아보는 것은 정보화에 의해 정치적 삶의 질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평가하는 기초적인 작업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정보화가 고도로 진행된다면, 아래의 정치활동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3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 사상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사회적 평등 등 국민의 자유 및 권리 보장과 관련된 4개의 항목; 투표 및 선거참여, 청원 시위 등과 같은 시민저항권 보호, 정부정책에 국민의사의 반영,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치지도자자를 선택하는 것 등 국민의 정치참여에 관련된 4개의 항목; 그리고 국가 및 정부활동과 관련된 공정한 법의 집행, 치안 및 질서유지, 정부의 대민봉사, 의회 및 정당활동, 지방자치 등 5개 항목이 그것이다. 즉 본 질문은 고도정보화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정치참여, 그리고 국가 정책 및 활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7〉에서 각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언론 자유의 경우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조사대상자의 78.6%,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13.1%, 그리고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7.9%이다. 사상·표현의 자유는 좋아질 것이다 76.4%, 변함이 없을 것이다 15.7%, 나빠질 것이다 6.9%이다. 공정한 법의 집행은 좋아질 것이다 61.7%, 변함이 없을 것이다 31.7%, 나빠질 것이다 5.7%이다. 사생활의 보호는 75.3%가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4.7%, 변함이 없을 것이다 9.3%이다. 투표 및 선거참여는 좋아질 것이다 56.7%, 변함이 없을 것이다 31.0%, 나빠질 것이다 11.7%의 분포를 보인다. 청원이나 시위 같은 시민저항권 보호는 53.6%가 좋아질 것이다. 31.7%가 변함이 없을 것이다. 13.8%가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을 하고 있다. 고도정보사회가 도래하면 정부의 치안 및 질서유지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64%, 변함이 없을 것이다가 26.4%, 그리고 8.6%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대민봉사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78.1%으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변함이 없을 것이다가 16.4%, 나빠질 것이다가 4.5%이다. 의회 및 정당활동이 좋아질 것으로 본 응답자는 60.9%, 변함이 없을 것이다 33.8%, 나빠질 것이다 0.9%의 분포를 나타낸다. 정보화의 진전이 사회적 평등을 좋아지게 할 것이

〈표 7〉 고도정보화가 정치활동에 미치는 영향

항 목	악화 ←-----그대로-----→ 개선				
	-2	-1	0	1	2
언론의 자유	1.2%	6.7%	13.1%	57.4%	21.2%
사상 표현의 자유	1.9	5.0	15.7	56.4	20.0
공정한 법의 집행	1.9	3.8	31.7	49.3	12.4
사생활의 보호	27.4	47.9	9.3	9.5	5.2
투표 및 선거참여	1.9	9.8	31.0	41.7	15.0
청원·시위 같은 시민 저항권의 보호	1.7	12.1	31.7	42.4	11.2
치안 및 질서유지	1.0	7.6	26.4	47.1	16.9
정부의 대민 봉사	1.2	3.3	16.4	51.9	26.2
의회 및 정당활동	0.5	4.0	33.8	48.3	12.6
사회적 평등	3.8	11.4	40.0	32.6	11.4
지방자치	1.7	2.1	23.6	54.3	16.9
정부정책에 국민의사의 반영	1.2	1.9	22.9	52.1	21.4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치지도자 선택함	1.7	2.1	36.0	44.0	15.7

라는 응답은 44%정도이고,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40%나 되며 15.2%는 나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방자치는 71.2%가 좋아질 것으로, 23.6%가 변함이 없을 것으로, 3.8%가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정책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은 좋아질 것이다 73.5%, 변함이 없을 것이다 22.9%, 나빠질 것이다 3.1%이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치지도자 선택에는 좋아질 것이다 59.7%, 변함이 없을 것 36.0%, 나빠질 것이다 3.8%의 분포를 나타낸다.

정보화가 고도로 진행되면,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정치영역은 언론 자유(78.6%), 정부의 대민봉사(78.1%), 사상표현의 자유(76.4%), 정부정책에 국민의사의 반영(73.5%), 지방자치(71.2%), 치안 및 질서유지(64%), 공정한 법의 집행(61.7%), 의회 및 정당활동(60.9%),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치지도자를 선택하는 것(59.7%), 투표 및 선거참여(56.7%), 청원이나 시위 같은 시민저항권 보호(53.6%)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사생활 보호는 75.3%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사회적 평등도 변함이 없거나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55.2%나 된다. 즉 정보화가 국민의 자유 권리에 미친 영향에는 언론의 자유, 사상표현의 자유는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본 반면에, 사생활 보호와 사회적 평등은 크게 악화되거나 별로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낸다. 국민의 정치 참여와 관련하여서는 국민들의 의사가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정도는 크게 개선되리라 전망되지만, 정치지도자의 선택이나 투표 및 선거 참여, 시민저항권 보호는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국가

정책 및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고도의 정보화로 인하여 대민봉사나 지방자치와 같은 정부활동은 개선될 것으로 다수가 전망하며, 치안 및 질서유지, 공정한 법의 집행, 의회 정당활동 등도 상당수가 좋아지리라 전망하고 있다.

각 정치활동에 대해 매우 나빠질 것, 다소 나빠질 것, 변함 없을 것, 다소 좋아질 것, 매우 좋아질 것이라는 답항에 대해 각각 가중치를 -2, -1, 0, 1, 2점을 주어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표 8>을 보면, 전체 정치활동의 평균 점수는 0.62점으로 정보화가 고도로 진행된다면 정치활동은 다소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다른 영역의 전체 평균점수와 비교하여 보면, 경제 활동은 1.13점, 사회심리활동은 0.35점이어서, 응답자들은 정치활동이 경제 활동 다음으로 고도정보화에 의하여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 정치영역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정부의 대민봉사(1.00), 언론의 자유(0.91), 정부정책에 국민의사의 반영(0.91), 사상·표현의 자유(0.88), 지방자치(0.84), 치안 및 질서유지(0.72),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치지도자 선택(0.70), 의회 및 정당활동(0.69), 공정한 법의 집행(0.67), 투표 및 선거참여(0.59), 청원·시위같은 시민 저항권 보호(0.50), 사회적 평등(0.37), 사생활 보호(-0.83)의 순이다. 사생활 보호를 제외한 모든 정치활동들은 정보화가 고도로 진행된다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 및 선거 참여, 시민저항권 보호, 사회적 평등 등은 전체 평균치보다 낮아 여타 정치활동보다 부정적인 전망을 드러낸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언론의 자유, 사상·표현의 자유는 매우 높게 개선될 것으로 보지만, 사회적 평등은 조금 개선되거나 변함이 없을

<표 8> 정치활동의 평균점수 및 종사부문별 평균점수

항 목	전 체	제조유통서비스	금융부문	언론·출판	학술연구
언론의 자유	0.91	0.93	1.00	0.73	0.99
사상·표현의 자유	0.88	0.85	0.94	0.80	0.96
공정한 법의 집행	0.67	0.66	0.74	0.64	0.65
사생활 보호	-0.83	-0.76	-0.59	-0.90	-1.10
투표 및 선거 참여	0.59	0.61	0.75	0.40	0.58
시민 저항권 보호	0.50	0.52	0.55	0.46	0.46
치안 및 질서유지	0.72	0.65	0.81	0.71	0.74
정부의 대민봉사	1.00	0.87	1.14	0.89	1.11
의회 및 정당활동	0.69	0.58	0.81	0.68	0.72
사회적 평등	0.37	0.32	0.48	0.48	0.19
지방자치	0.84	0.81	0.87	0.85	0.84
국민의사 정책반영	0.91	0.87	1.03	0.79	0.97
지도자 자유 선택	0.70	0.77	0.75	0.59	0.70

것으로, 사생활은 침해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 정치참여는 정부정책에 국민의사의 반영,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치지도자 선택 등은 평균 이상으로 개선되리라 보지만, 투표 및 선거참여, 시민저항권 보호 등은 평균 이하의 점수를 나타낸다. 국가정책 및 활동과 관련해서는 행정부의 활동(대민봉사, 지방자치, 질서유지)이 가장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다음으로 입법부 활동(의회 및 정당활동)과 사법부 활동(법의 공정한 집행)은 비슷한 정도로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있다.

각 종사부문별로 평균점수를 비교하여 보면, 금융부문이 사상·표현의 자유와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치지도자를 선택한다는 항목 이외의 다른 모든 활동에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사상·표현의 자유에서는 학술부문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주어 낙관적인 전망을 하며,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치지도자를 선택한다는 항목에는 제조·유통·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가 정치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한 부문은 언론·출판 종사자로서 이들은 언론의 자유, 사상·표현의 자유, 공정한 법의 집행, 투표 및 선거참여, 시민저항권 보호, 정부정책에 국민의사의 반영,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치지도자 선택 등의 항목에서 가장 낮은 개선전망을 보이고 있다. 학술연구부문의 종사자들은 사생활의 보호, 사회적 평등, 시민저항권 보호 등에서 다른 부문보다 부정적인 전망을 피력하며, 제조·유통·서비스 부문에서는 치안 및 질서유지, 정부의 대민봉사, 의회 및 정당활동, 지방자치 등 국가활동의 개선여부에 가장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결국 금융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보화가 정치 활동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 반면에, 언론·출판 부문의 종사자들은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나타낸다.

고도 정보화가 정치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성, 연령, 교육수준, 가족소득 등 응답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기본변수와의 관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성은 t-test를, 나머지 변수는 ANOVA의 F-test를 하였다. 유의수준이 5% 이내에서 집단간 평균점수 차이가 존재하는 것만을 제시한 것이 〈표 9〉이다. 성별로는 언론 자유, 사상·표현의 자유, 공정한 법의 집행, 사생활 보호, 정부의 대민봉사 등에서 차이가 발견되며: 연령별로는 사생활 보호, 정부의 대민봉사 등에서: 교육수준별로는 사생활 보호에서: 그리고 가족소득 수준별로는 정부의 대민봉사에서 유의미한 평균점수 차이를 보인다. 즉 사생활 보호와 정부의 대민봉사 등에서 응답자들은 성,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가족소득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남자는 여자에 비해 고도 정보화 사회가 되면 언론의 자유, 사상·표현의

〈표 9〉 집단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 '정치영역의 삶의 질' 항목들

독립변수	정 치 활 동	구 분	평균점수	유의수준
성	언론의 자유	남 자 여 자	1.00 0.72	0.002
	사상표현의 자유	남 자 여 자	0.99 0.68	0.001
	공정한 법의 집행	남 자 여 자	0.73 0.55	0.027
	사생활 보호	남 자 여 자	-1.00 -0.47	0.000
	정부의 대민봉사	남 자 여 자	1.08 0.81	0.002
연 령	사생활 보호	24세 이하 25~29세 30~39세 40세 이상	-0.11 -0.96 -1.01 -0.99	0.012
	정부의 대민봉사	24세 이하 25~29세 30~39세 40세 이상	0.64 1.02 1.06 1.20	0.019
	사생활 보호	고등학교 이하 초급·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이상	-0.15 -0.67 -1.01 -1.00	0.033
	정부의 대민봉사	143만원 이하 144~215만원 216~311만원 312만원 이상	1.07 0.94 0.93 1.29	0.044
가족소득				

자유, 공정한 법의 집행, 정부의 대민봉사에 있어서 현재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생활 보호는 여자에 비해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는데, 전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정보화가 정치적 삶에 미치는 영향(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이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젊은 층이 연령이 많은 층에 비해 정보화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사생활 보호는 덜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생활이 가장 많이 침해받을 것으로 생각한 연령층은 30대이며, 40대 이상, 20대 후반의 순이다. 반면에 정부의 대민봉사는 고연령층이 더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20대 전반에 비

해 40대 이상은 정부의 국민봉사가 두 배 정도나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정보화가 사생활을 더 많이 침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대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들의 1/4 정도로 사생활 보호가 덜 악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족소득 수준이 312만원 이상인 부유층과 143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144~311만원 정도의 중간층에 비해 정부의 대민봉사가 더 개선될 것으로 여겨고 있으나 그 차이는 그다지 큰 편은 아니다.

결국 사회·인구학적 기본변수별 정치적 삶의 질 차이에는, 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연령이고, 교육수준과 가족소득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정보화 매체 이용자·비이용자와 정치활동

정치활동에 대한 전망을 과거에 정보화매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경험이 없는 사람들간에 유의수준 5%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t-test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정보화 매체의 이용여부는 컴퓨터통신, 사무 판매 금융자동화 기술, 행정전산망 등에 국한하였다.

첫째, <표 10>에서 보듯이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경험이 없는 집단간에는 정치활동 전체, 사생활 보호, 시민저항권 보호 등에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이용집단이 비이용집단에 비해 사생활 보호는 덜 나빠질 것으로, 시민저항권 보호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며, 정치활동 전체도 더 개선되리라 전망하고 있다.

둘째, <표 11>에서 보듯이 사무·판매·금융자동화 기술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경험이 없는 집단간의 정부의 대민봉사, 지방자치 등 항목의 평균점수 차이가 유의미하다. 여기서도 이용집단이 비이용집단에 비해 정부의 대민봉사와 지방자치가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표 12>에서 보듯이 행정전산망의 이용여부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는

<표 10> 컴퓨터 통신 이용여부에 따른 정치활동의 평균 차이 분석

구 분	이용집단	비이용집단	유의수준
정치활동 전체	0.69	0.58	0.046
시민저항권 보호	0.62	0.43	0.048
사생활 보호	-0.65	-0.94	0.016

〈표 11〉 자동화 기술 이용여부에 따른 정치활동의 평균 차이 분석

구 분	이용집단	비이용집단	유의수준
대민봉사	1.08	0.85	0.007
지방자치	0.90	0.72	0.028

〈표 12〉 행정전산망 이용여부에 따른 정치활동의 평균 차이 분석

구 분	이용집단	비이용집단	유의수준
정치활동 전체	0.71	0.59	0.030
언론 자유	1.06	0.87	0.026
사상표현의 자유	1.11	0.81	0.001
지방자치	0.99	0.79	0.035
지도자 자유선택	0.87	0.65	0.011

정치활동 전체, 언론의 자유, 사상표현의 자유, 지방자치, 자유로운 지도자의 선택 등에서 유의미하다. 각 항목에 대해 이용집단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전체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더욱 낙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결국 행정전산망의 이용 여부가 컴퓨터통신이나 자동화 기술의 이용 여부보다는 정치활동에 더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보화 매체의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정보화 사회에서의 정치활동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부분적으로나마 시사하는 것이다.

IV. 맺음말

정보화의 진행이 정치적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영역의 정보화가 진행되면(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으로는 “행정전산망이 구축되어 운용된다면”) 개인의 삶의 질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대인관계에서는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더 악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응답자들은 행정전산화가 개인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것이라고 보지만, 반면 이것은 사회를 개인주의화, 과편화시킴으로써 동료·이웃·인간관계가 더욱 소원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고도로 정보화가 진행된다면, 정치활동은 대체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은 상당히 침해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셋째, 정보화 매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정보화 사회에서 정치적 삶의 질에 대해 더욱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비이용자 모두 대인관계, 사생활 보호 등을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여, 개인

주의화와 공동체의식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넷째, 언론·출판부문 종사자들이 다른 부문 종사자들에 비해 정보화 사회에서 정치적 삶의 질에 대해 더욱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금융부문과 학술부문 종사자들은 다소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다섯째, 정보화가 정치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구학적 기본변수로는 성, 연령 등이었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정보화가 사생활 보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영역에서 삶의 질을 개선시키리라 부분적으로 낙관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부분적으로 다소 낙관적이었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도 부분적인 영역에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 연령에 비해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여섯째, 전체 평균점수가 개인의 삶은 0.45점(최고점수 3점), 정치활동은 0.62(최고점수 2점)으로 그다지 높지 않다. 이를 통해 정보화 사회에서 정치적 삶의 질에 대하여 “다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낙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광웅 편

1990 『선거의 정치경제학』, 서울: 나남.

김세원·추광영 편

1987 『정보화 사회의 도전』, 서울: 무역경영사.

박성호

1992 “정보사회와 삶의 질, 그리고 정보통신기업의 역할.” 한국통신, 『경영과 기술』 2: 5-15.

박한규

1991 “정보사회와 국가발전,” 『21세기논문』 여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6 『정보화 사회의 도전과 대응』.

1989 『행정전산망의 구축에 따른 사회적 함의에 관한 조사연구』.

신도철

1981 “한국인의 <삶의 질> 대연구.” 『정경문화』.

1982 “공산권에서의 삶의 질의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4권 제1호.

안정시

1985 “정보사회와 민주주의: 뉴미디어 활용의 정치적 명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7권 제4호.

통신개발연구원

1988 『민주사회발전을 위한 정보화의 과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1992 『정보화사회론』. 서울: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홍병유 · 이상덕
1986 『정부 행정수요전망과 행정전산화의 타당성』. 서울: 통신정책연구소.
- Andrews, Frank, and Stepan Withey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 Plenum.
- Barnes, S., and M. Kaase
1973 *Political Action: Mass Participation in Five Western Democracie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Inc.
-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New York: Harper and Row.
- Campbell, Angus, Philip Converse, and Willard Rodgers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Inglehart, Ronald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ee, Hong-Koo, Kyong-Dong Kim, and Doh C. Shin
1982 "Perceptions of Quality of Life in Kore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
- Poweer, Thomas M.
1980 *The Economic Value of the Quality of Life*.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Shin, Doh C., Chung-Si Ahn, Kyong-Dong Kim, and Hong-Koo Lee
1983 "Environmental Effects on Perceptions of Life Quality in Kore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 393-416.
- Shin, Doh C., and Myung Chey
1992 "The Experience of Democratization and Quality of Life among the
Korean Mass Public."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atterns and Meaning of Democratization* to be held at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on November 20-21, 1992.
- Toffler, Alvin
1981 *The Third Wave*. New York: Bantam Book.
- Verba, S., and N.H.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New York: Harper and Row.